광주 표문화전당 건립비 656억
전남 여수박람회 SOC 7,681억

■새해 국고 어떤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나

신안 압해~암태 새천년대교 설계비도

2007년 광주·전남지역 국비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현안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체 예산이 1조 3천467억원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지역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오히려 증액됐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광주·전남지역 주요 사업들을 살펴본다.

◇**신규사업예산 대폭 반영**=광주는 솔라시티 센터 기반 구축(20억원)과 에너지 홍보관 건립(52억원)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한국전력의 나주 이전과 연계해 광주시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신에너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용이해지게 됐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30억원이 배정돼 광주시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전남의 경우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할 신안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의 건설 설계비 10억원과 세라믹 종합센터건립비 20억원(총사업비 3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정부의 서남권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총공사비 5천8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인 새천년대교는 일단 설계비가 확보됨으로써 교량건설의 물꼬가 터진 셈이다.

또 영산강 고대문화권 강변도로건설 설계비 7억원(3천546억원), 국도 77호선 신지~고금간 연도교건설 설계비 10억원(1천260억원), 덕양~주삼간 여수시 우회도로 45억원(875억원)이 반영됐다.

국립 영산강고문화박물관 10억원, 신안지역 속칭 '다이아몬드제도' 해양레저단지 13억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17억원, 마그네슘사업화 지원시설 25억원,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 20억원 등 41건의 신규사업 예산 1천38억원이 확보됐다.

◇**광주 문화중심도시 기반 조성(교육·문화·환경)**=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건립 656억원, 전당콘텐츠 확보 및 홍보 70억원, 2007년 전국체전 개최준비 127억 등 총 10건의 사업비가 확보됐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로 10억원이 신규로 반영된 CGI(컴퓨터형성이미지)센터 구축사업은 향후 340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문화콘텐츠 분야와 연계가 가능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분야의 경우 지역대학특성화사업 228억원과 2단계 두뇌한국21 135억원, 과학연구단지 육성 40억원,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25억원 등의 사업비가 확보됐다.

특히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추진됐던 국립과학관도 경제성 논란으로 인해 건립 차질이 우려됐으나 진통끝에 건립 설계비 12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반영됐다.

도심 5대공원 도시숲 조성과 광주천 자연환경 정화사업 등 쾌적한 도시만들기 분야에 340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110억원,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 94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37억원 등의 사업비가 확보됐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희망 높아져**=여수세계박람회 관련 SOC사업은 7천681억원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2천743억원, 순천~여수간 철도개량 900억원, 여수~순천간 국도 17호선 700억원 등이 반영돼 세계박람회 사무국의 실사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됐다.

◇**SOC 확충 가속도**=광주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주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SOC분야건설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전남도의 경우도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의 50.6%인 2조 4천479원이 SOC 관련 예산이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전남지역 SOC 확충작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5개 노선에 4천399억원,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 3천707억원, 무안국제공항 공사 370억원, 호남고속철 502억원 등 5개 철도사업에 2천477억원, 비아~완도간 국도 4차로 확장사업 등 국도 확·포장사업에 모두 5천972억원이 지원된다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와 평동산단을 연결하는 서광산IC~옥동차량기지 진입도로(100억원) 개설사업이 신규사업에 포함, 송정권 주민들 편의와 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의 물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의 광주 사업구간 연장 및 설계비로 20억원이 반영, 공동혁신도시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부 순환도로(16억원) 건설은 향후 연제동 지역과 첨단지역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주요신규사업

광주시 (단위:억원)

사 업 명	국회확정액
문화산업(창작스튜디오)	39
자동차산업 육성	30
하남산단 외곽도로 건설	36
서광산 I·C진입도로 개설	100
아시아문화콘듀셔 양성	66
2단계 두뇌한국21	135
솔라시티 센터 기반 구축	20
에너지 홍보관 건립	52
수완~첨단간 도로개설	389
어등산 불발탄제거	7

전남도

사 업 명	국회확정액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10
덕양~주삼 여수시 우회도로	45
영산강 고대문화권 도로건설	7
국도 77호선(신지~고금간) 연도교 건설	10
세라믹 종합센터 건립(청계농공단지)	20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여수시)	10
남고매실 가공공장 및 저장시설(구례)	14
일선수협 경영개선 (흑산도 수협 면세유 공급시설)	8
함평IC~수호리 국도건설	30
남악신도시 Sun City 시범단지 개발	51

"지역의원들·지자체 공조 기대 이상의 성과 거뒀다"

국회 예결위원 김동철의원

"전년 대비 광주·전남 국비 예산이 총 8천203억원(15% 순증)이 늘어 총액 규모로 6조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는 모양이 좋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국비 예산 확보가 쉬웠던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한나라당의 집요한 예산 삭감 움직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그러나 지역 의원들과 지자체와의 상호공조 체제로 기대 이상의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남해안 발전 구상과 관련, 기획예산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등 3건의 신규사업과 광주~완도 고속도로 연장 등 SOC 지원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며 "향후 서남권 구상과 관련된 신규사업에 총 1조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이번 지역 국비 예산은 SOC는 물론 산업 활동 기반 구축,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반영됐다"며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SOC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돼 접근성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확보가 가장 어려웠던 사업으로 광주과학관 설립 및 광주~무안 고속도로의 서광산 IC 진입 등을 꼽은 김 의원은 "소속 정당을 떠나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막판까지 발로 뛰어 6조원대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권오규 재경부총리가 27일 국회에서 부동산특위 당정 회의에서 부동산 보완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춘희 건설교통부차관, 오른쪽은 김성호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정부 "공급 감소 부작용" 반대

■당정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무산 배경

분양제도 개선의 마지막 남은 과제였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정부의 반대로 도입에 실패했다. 당정은 27일 3차협의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에 추가 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부동산특위 활동을 2주간 연기하면서까지 밀어붙여 결론내려고 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민·관개선委도 "인하 효과 불투명"

기본형 건축비 내역 공개는 합의

◇**정부측 '실익없다' 끝까지 고수**=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분양제 개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둔 부문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였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일찌감치 합의가 이뤄졌지만 분양원가까지 공개해야 분양가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정부는 시종일관 분양원가 공개에는 반대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도 정부측을 거들었다. 위원회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분양가 인하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봤으며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기본형 건축비 공개 효과는**=당정은 이날 기본형 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분양원가 공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공개 대상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가운데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기본형 건축비의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소비자에게 분양가가 투명하게 책정됐다는 심리적인 효과외에 실제 건축비를 낮추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분양제 개선 방향 윤곽 드러나**=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세 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향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1차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분양가 상한제와 2차 당정협의에서 일치한 공영개발 확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시범실시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9월부터 민간아파트에도 적용된다. 법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1999년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 이후 8년만에 다시 분양가에 정부의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공영개발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영개발이 늘어나면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만 민간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해지게 된다.

◇**분양가 인하 효과는**=여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로 확대되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보다 20~30%는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은 토공, 주공 등의 판매가격을 그대로 인정 하고 건축비만 제한하는 '건축비 상한제'다.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분양가를 20~30%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건설업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민간택지는 분양가의 60~70%가 땅값이 차지하고 있어 땅값을 낮추지 않는 한 20~30%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